

기관돋보기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하고 따뜻한 복지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27년간 도내 노인 복지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하며 상담, 교육, 여가, 건강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800~1000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해 활기찬 노년을 누리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충북시니어스마트체험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과 사회 참여, 정서 회복 및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정서·건강 프로그램, 지역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꾸준히 A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편집자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1998년 개관 이후 27년간 충북 도내 어르신들에게 상담, 교육, 여가, 건강, 사회활동, 권리증진 등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광역복지관으로, 하루 평균 800~1000명의 어르신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복지관은 전국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6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16년에는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와 자원봉사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2017년에는 제6회 인구의 날 기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응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전문성 강화에 앞장섰다.

또한, 광역복지관으로서 충청북도노인광역상담센터, 충북시니어스마트체험관 운영, 충북노인문화기획회, 충북노인복지연구,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 등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영상자서전·스마트체험·100세 힐링센터로 어르신 맞춤형사업 추진 스마트 기반 구축 등 '따뜻한 디지털 복지'로 미래전환 준비 본격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며 도내 노인복지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어르신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복지, 맞춤형 교육·여가 프로그램,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충북시니어스마트체험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등 핵심 특화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디지털 역량 강화, 자립 지원에 기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내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과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충북시니어스마트체험관'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일상 속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시대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남성 독거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노년과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특화사업의 활성화로 복지관 이용자 구성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회원 약 1만여 명 중 남성 어르신이 60%, 여성 어르신이 40%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신규 회원이 꾸준히 늘고 특히 남성 어르신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노년층의 활발한 사회참여 욕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관의 대표적 성과로는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와 어르신 자긍심 함양

을 들 수 있다. '천사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소액을 기부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하며 나눔 문화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수혜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배우자 사별 등으로 관계 단절을 겪는 남성 독거 어르신의 일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시작 이후 3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고독감 해소와 자립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 부족, 예산 제약,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준환 관장은 "이웃 수요에 비해 부족한 물리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충 없이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지역사회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인프라와 예산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복지관이 지역복지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 삶의 가치를 디자인하는 복지공동체'라는 미션 아래, '스마트하고 따뜻한 복지관'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충북형 스마트 시니어 활동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르신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과 사람이 조화된 정서적 공감과 관계 중심의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 3개 시니어클럽이 iM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사회복지 증진 위해 '따뜻한 금융' 실천

iM사회공헌재단,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대 위한 후원금 전달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협의회)는 iM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병우)으로부터 충북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iM사회공헌재단은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ESG 기반 사회공헌 재단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사회복지사 복지 증진,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충북협의회를 비롯해 청주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박진홍), 청

주청원시니어클럽(관장 김학도), 청주흥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 등 총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유응모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iM사회공헌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금은 충북 도내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성태문 부사장은 "iM의 따뜻한 마음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지역민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 내년 복지 예산안 2조 8614억원 편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북도는 11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7조 1683억보다 5020억원(7.0%) 증가한 규모인 7조 6730억원이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과 일하는 복지 실현에 2조 8614억원을 편성했다.

일하는 법제와 충북형 도시근로자, 청년 인턴 등 충북형 특색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 이동 진료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첨단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2029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디지털·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혁신 구현을 위해 사용한다.

아울러, 활기찬 농촌 조성과 생태환경 보전에는 1조 2790억원을 편성에 충북

형 귀농귀촌 보급자리 조성하고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 과 그림책 정원 1937,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등 충북 관광객 50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예산은 2065억원, 청주공항 정기·부정기 국제노선 운항 지원금과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지방도 확장·포장 등 안전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9892억원을 반영했다.

이동욱 행정부지사는 "자주재원 증가율은 미미하고 의무 지출 지속 증가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강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도 예산안은 4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전경.



복지관 이용자들이 2025 행복실버대학 가을 축제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발송횟수: 주 3회(문자서비스)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 500만원 조정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확대... 수술·시술 없어도 이용

충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용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비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으로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시행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술·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했다. 이를 통해 의료비후불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면서 2만여 명의 한부모가족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도민 누구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 99%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 모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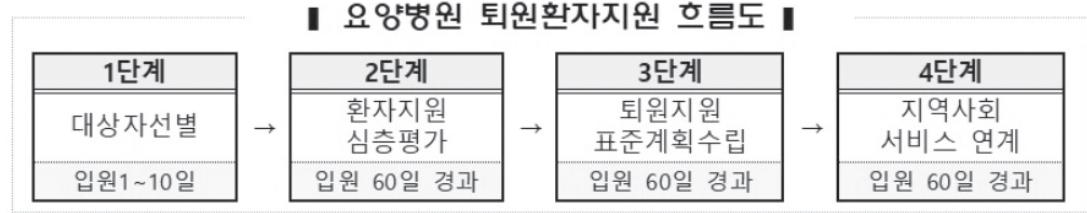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법사회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 경기도도 정책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건보공단,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 강화



기존 일부 지역 운영 ‘자원연계 시스템’ 연내 전국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2일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퇴원 후 의료 외 돌봄·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입원 후 60일이 지난 환자 중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자이다. 이 제도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이 같은 퇴원예정 환자를 발굴·상담해 지자체나 지역돌봄자원(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일상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재입원율을 낮추고 가족의 돌봄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지자체 간 자원연계 시스템’ 사용지역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정보를 지자체로 안전하게 연계해 의료·돌봄 연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신규 콘텐츠 4개 강좌 신설, 퇴원환자 지원 실무가이드북 제작, 안내문과 리플릿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장벽없는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기준 대폭 개선

과기부 검증 기준 준수·음성 안내 설치로 정비

의무 불이행시 인권위 진정... 300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격적 편의 제공 의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해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

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는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했다. 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위로 선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과기부 검증 기준에 이미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등이 포함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세부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또 바닥 면적 50제곱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키오스크 대신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 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악의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해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 540만 식 지원

지원 식수 지속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질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성균관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에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할 예정으로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717억 증액 필요성 강조”

노인·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위해 재정 지원 확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일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모든 시군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려면 717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시작 단계이므로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706억 1800만원 늘어난 777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일부 지자체 의료서비스 확충과 신규 채용 공무원 인건비는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만

지원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정 장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9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33억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인 14%를 준수하도록 조정될 계획이며, 경로당 부식비는 내년부터 지역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별도 사업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 연금 국고 투입, 대한적십자사 신뢰 회복, 보건복지 인공지능(AI) 사업 관리 등 복지 현안도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예산, 지원 체계,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취약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다문화가족센터·긴급쉼터... 특별재난지역 전액 지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 왔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생활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주시가족센터, 충북 거점센터 지정

내년부터 4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네트워크 강화·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충주시가족센터(센터장 심재석)는 2일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로 공식 지정되며,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 구축과 정책 연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충주시가족센터는 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성, 지리적 접근성, 시설 인프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거점센터로서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센터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발굴·보급, 사업 관리 및 컨설팅, 방문지도사 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연계 등 광역 단위의 협력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도내 가족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립지원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성이 존중되는 가족공동체 문화



충북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로 지정된 충주시가족센터 입구.

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심재석 센터장은 “이번 거점센터 지정을 계기로 충주시가 다문화가족 지원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도내 각 기관이 협력해 충북이 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함께 강릉 나들이를 다녀왔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추억 만드어요”

직원 등 200여 명 강릉 나들이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1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 명이 강릉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은 복지관 가족 모두

가 함께한 자리로, 참여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단순한 여행을 넘어 ‘함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하루였다.

전호찬 관장은 “복지관이 20년 동안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나들이는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삶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누구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 발전과 종사자 권익 신장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종사자 연수 및 회장 이·취임식

권익신장 촉구 피켓 퍼포먼스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이종민)는 지난달 24일 청주 S컨벤션에서 '2025년 충북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와 협회장 이·취임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에 앞서 회원들은 아동복지의 미래 발전 방향과 권익신장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

를 펼치며 현장의 결속을 다졌다.

연수는 김준환 충청대학교 교수의 ‘심사위원 관점에서 보는 프로포절 작성 비법’, 김미겸 티나 에듀 강사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체와 조직문화’ 특강으로 이어졌

다. 두 강연은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어 40여 년간 충북 아동복지 발전에 헌신한 권현숙 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같은 자리에서 이종민 회장의 공식 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임사에서 권현숙 전 회장은 “희망디딤돌 재위탁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종민 신임 회장은 “짧은 패기와 새로운 비전으로 내실 있고 당당한 협회를 만들겠다”며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정책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주흥덕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은 '제4회 시니어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바리스타 전국대회 ‘썩썩이’

카페온경 김정옥 ‘대상’
카페별담 안문진 ‘우수상’

청주흥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이 운영하는 공동체사업 ‘카페온경’과 ‘카페별담’의 참여자가 지난 7일 열린 ‘제4회 시니어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소속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라떼아트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보건복지부·한국시니어클럽협회·스타벅스가 2022년부터 공

동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본선에는 권역별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바리스타가 참가했다.

본선 무대에서는 ‘카페온경’의 김정옥 참여자가 대상을, ‘카페별담’의 안문진 참여자가 우수상을 차지하며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상을 받은 김정옥 참여자는 완성도 높은 라떼아트를 선보여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김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기량을 꾸준히 쌓아온 베테랑 시니어 바리스타로, 고객에

게 더 나은 커피 경험을 제공하려는 열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안문진 참여자는 세련된 라떼아트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단순한 일자리 참여를 넘어 직무 숙련도와 품질 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17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경륜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 발굴 캠페인

홍보물 배부, 공동체문화 확산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순경)는 4일 2회에 걸쳐 진행된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해 봉양음과 용두동 일대에서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복지 정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인근 상가를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소외 계층 발굴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용두동에서 는 어려운 이웃 약 30가정에 직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했다.

접 방문해 5kg 상당의 김치를 전달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순경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설립 이후 사회복지 조사·연구, 자원봉사자 발굴·교육 사업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반찬 지원, ‘좋은 이웃들’ 사업, 기부식품 제공(푸드뱅크·푸드마켓)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이전전립 착수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6일 진천읍 장관리에서 ‘복지관 이전전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도·군 관계자, 사회복지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전립 사업은 벽암리 공동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이 공비주택 부지에 위치해 이전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군은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인 하일건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장애인복지관 신축건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인수받을 예정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건물 2개 동, 전체 면적 3473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국민 안전망 · 통합돌봄 확대 등 5대 핵심 분야 강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6000억

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 맞춤 지원 필수으로 확충에 재정 집중

AI·바이오헬스·정신건강 등 투자 확대해 복지·의료체계 혁신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을 137조 64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9.7% 증가한 이번 예산은 ▲국민 삶의 안전망 강화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지역 · 필수 의료 확충 ▲의료인력과 정신건강 투자 ▲AI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확대, AI 돌봄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R&D 투자로 복지 · 의료 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적인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충한다.

우선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000원, 연간 15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를 인성하는 등 의료 보장성도 확대된다.

② 저소득층의 노후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그동안 납부 재개자에에만 제공되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의료 · 요양 ·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혀 183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은 기존 고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 방과후활동 · 재산관리 서비스도 보강한다.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도 신설된다.

③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 및 생애주기별 지원이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과 기준 연금액도 상향된다. 나아가 치매환자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시범 도입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과 노인 개인 수술비 지원이 확대되는 등 장사 · 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④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심뇌혈관질환과 모자의료 분야의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해 권역 ·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을 위한 신규 응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가 신규 지원되며,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 확충과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를 통해 응급실 수용 지역을 해소한다.

지방의료원에는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보강하며 AI 기반 진료모델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⑤ 의료 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 성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 전공의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인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 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들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 동료지원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확대 등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⑥ 복지로료 분야 시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AI 기반 상담 · 기록 · 위기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고,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데이터 바꾸쳐 확대와 의료 AI 실증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1조원 이상으로 늘려 질환 극복기술과 혁신 신약 ·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제약 ·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장품 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투자는 3배 이상 확대된다.

■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① 암 · 심뇌혈관 ·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리고,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장비비 지원과 센터 확충, 성과보조금 확대도 함께 추진해 필수 전문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고위험 산모 · 신생아를 위

한 전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도 확충해 산모 · 신생아 전문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나이가 응급의료 기반도 보다 촘촘하게 다듬는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응자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이 인상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확대되며, 광역응급상황실 인력도 증원된다. 아울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거점센터도 신규로 지정해 시설과 장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②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속도를 낸다.

지역거점병원의 기능 특화와 필수의료 운영 지원을 유지하면서 노후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3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권역 내 최종진료를 책임지는 기관에는 중증필수 분야의 시설 · 장비 지원이 유지되고, AI 기반 진료모델 도입을 위한 신규 지원도 마련된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지역도 확대한다. 아울러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넓히고, 시 · 도 공공보건지원단 운영도 강화하여 지역 공공의료의 기능을 탄탄히 한다.

■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규모를 15만 8000명까지 늘린다.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과 의료비 지원도 3억원 증액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은 다자녀(2명 이상)와 장애인가정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3만 5000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아동 양육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49만 7000명에게 새롭게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청년의 고립 ·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는 4개소에서 8개소로 늘린다.

②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어르신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약 10.4% 수준에 해당하는 115만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신규 배치하고, 노인일자리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인력도 확충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43만 명 늘리고, 기준연금액도 6850원 인상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높인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①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평가 방식을 성과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수련 교육과 평가체계 전환을 개편한다. 또한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한 필수과 전공의의 책임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필수 진료과목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도 새로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 평가 제도는 예비적으로 마련해 인력 양성 기준을 체계화한다.

② 정신건강 관리체계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응급실 기반의 생명사망 위기대응센터와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해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③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이 늘어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과 모임 지원이 강화되며, 동료지원인 45명이 신규 배치된다. 여기에 더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기존 130병상에서 140병상으로 확대되어, 급성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 AI 기반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AI 기반 복지 · 의료 서비스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돌봄현장 DX-AX'와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 수요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리빙랩' 시범사업도 병행해 AI 돌봄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② AI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예방, 생활안전 등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 응용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와 뷰티 ·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건강 관리와 의료시스템 개발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의료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AI 기술 도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 확대를 비롯해 AI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 AI 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미래 디지털 의료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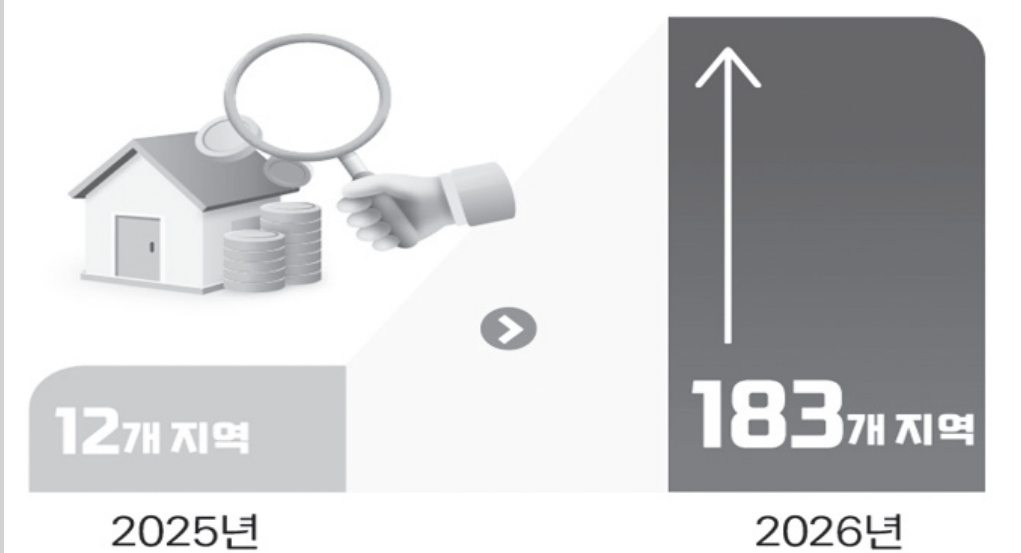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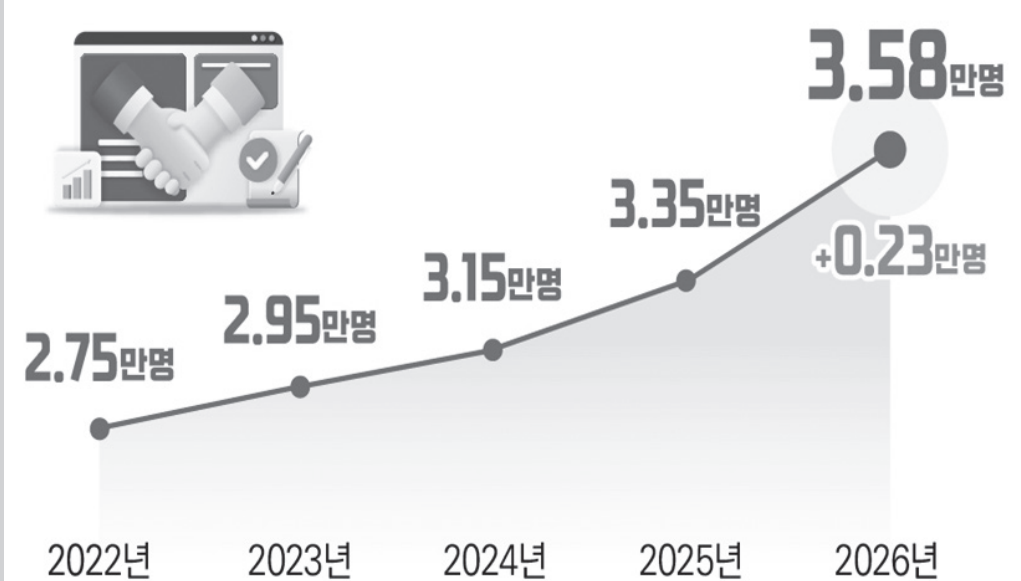


지금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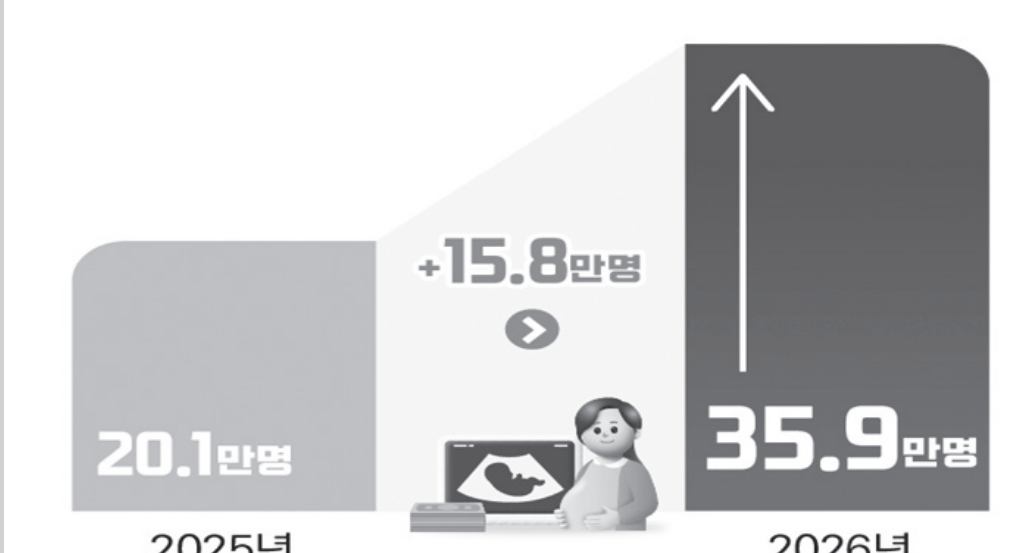
지역특화·틈새 서비스 확충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복지광장



김 보 결

충북지역아동센터장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누군가 나의 직업을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아, 그러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힘들지는 않나요?”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대비된 상황을 떠올린다. 전공을 묻는 질문에 “음악을 전공했어요”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이며 “와, 멋지시네요”라는 감탄으로 이어지곤 한다. 같은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음악 전공’이라는 답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사회복지사’라는 답에는 연

연민이 아닌 존중으로 불리고 싶은 이름

민과 살짝의 안쓰러움이 담겨 있다. 나는 이 반응의 격차 속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삶에는 힘든 순간이 많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정과 제도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으며, 누군가의 문제를 함께 떠안아야 하는 피로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하고 후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선생님, 오늘 간식 뭐예요?”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 속에는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허기진 마음으로 찾아온 아이들의 솔직한 기대와 안도가 담겨 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역할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힘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고, 그 과정에서 오가는 웃음과 대화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이 되고, 나에게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가끔은 아이스크림 간식 하나에도 ‘앗새!’라고 외치며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스스로 녹아내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게 간식에서 시작된 시간이

곧 놀이와 학습, 그리고 관계의 자리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의 현장’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늘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 속에만 머무르는 현실은 안타깝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사나 ‘희생’의 이미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낮추고, 때로는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힘든 이유는 클라이언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운다. 진정 힘든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할 때이다. 종사자의 인권과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미뤄질 때, 회의감이 찾아온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아니다.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며, 때로는 위기 속에서 위기가족을 지켜내는 조력자이다. 이러한 역할은 결코 즉흥적 선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행정과 재정 운영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전문 직업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처우와 인식은 그 전문성에 걸맞지 않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열정과 사명감만으로는 이 일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클라이언트와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도와 처우 개선이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것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일상은 결코 힘들단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누군가의 삶을 곁에서 지탱하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자, 세상의 희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주민의 안도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오래 걸어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사회복지사라면, 그 다리를 지탱하는 힘은 현장과 행정이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손을 맞잡을 때 생긴다. 사회복지사가 희생과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 가치를 되새기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직업을 물으며 “힘들지 않나요?”라고 묻는 대신 “참 멋진 일을 하시네요”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현장의 목소리



박 은 용

영실애육원 자립팀장

정부와 여러 후원단체가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자립 시에는 자립정착금(지자체별 상이),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시설 후원금 등이 지급되며, 또한 자립수당 월 50만원(최대 5년간)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중앙정부 환원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지급액의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은 2000만원, 경기·대전·경남·제주는 1500만원, 부산은 1200만원, 그 외 지역은 1000만원이다.

이처럼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여전히 현금·현물 중심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 아쉽다.

우리 시설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며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나 뚜렷한 전문기술이 없는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직장 내 복지와 대우 수준이 자립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이 자립 시 자립정착금·디딤씨앗통장·후원금 등 상당한 금액(2000~4000만원)을 보유하고 사회에 나가지만, 금융 관리나 소비습관이 부족해 단기간 내 전액을 소비하거나 사

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립한 지적장애 청년이 약 4000만 원의 자립 자금을 한 달 만에 게임머니 등으로 모두 사용하거나, 2600만원을 계획 없이 소비해 생계 곤란에 처하는 등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급전 관리와 사후관리의 부재로 자립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진로상담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온 한 청년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 취업해 안정적인 주거(LH 전세주택)를 확보한 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등 모범적인 자립을 실현했다.

이 사례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 자격증 취득 등 단계적 자립 지원이 성공적 자립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시다.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

첫째, 자립 준비 청년에게 공공·민간 취업 가산점 및 특별채용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채용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주에 ‘자립청년(보호종료 아동)’을 명시하고, 자립 후 고용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산관리와 사후관리 제도를 법적

화해야 한다.

자립 이후 일정 기간 후원과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 습관 교육 및 자산관리 감독을 병행하고, 자산이 사기나 과소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립 수당의 유예 및 인센티브 형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자립 직후가 아닌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이후 사회 정착 상황을 평가하여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정부 환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자립정착금 등 아동복지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 환원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자립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은 단순히 시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이다.

자립전담요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급전적 지원 못지않게 직업 안정성, 금융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병행되고, 지금처럼 사회의 사랑과 관심, 후원이 함께한다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칼럼

숫자에 갇힌 자활, ‘사람’을 보는 자활로



황 정 구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3년간의 노력 끝에 문을 연 자활기업이 정부 지원이 끊기자 반년 만에 폐업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참여자에게 남은 것은 동료에 대한 상처와 좌절뿐, 서류상 ‘창업 성공 1건’이라는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현실이 숨겨져 있다.

자활의 성과를 숫자로만 재단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자활은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권리를 통해 삶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

시혜 중심의 복지를 넘어, ‘일’이라는 생산 활동을 복지의 매개로 삼은 전환이었다. 이 출발선이 자활을 다른 고용정책과 구분 짓는 근거다.

하지만 제도의 운용 현실은 오랫동안 취·창업의 숫자로 성과를 재단해 왔다. 계량적 척도 속에서 사람의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참여주민만으로 구성된 자활기업의 90% 이상이 지원 종료 후 폐업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통한다.

그간 자활은 창업·취업·매출 중심의 지표로 평가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넓혔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도한 기업들은 지원이 끊기자마자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약 자활이 오직 취·창업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노동부나 산업부의 정책에 속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활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지가 다루는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곤란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빈곤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가족 해체나 은둔형 빈곤 사례에서 보듯, 고립은 생명과 직결된 위기를 낳는다. 자활은 이 고립을 끊어내는 복지의 수단이며,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하루 종일 술에 의존하던 이가 자활 참여를 통해 음주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은둔하던 수급자가 작은 일자리에서 사회와 다시 접촉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복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고용창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자활을 계량 지표로만 평가한다. 창업 건수, 취업 인원, 매출액 같은 수치가 자활의 성과를 좌우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평가 방식이다.

사람의 삶의 변화를 숫자로 환원하는 순간, 자활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자활은 취·창업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재구성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관계 중심의 주민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결과의 숫자가 아닌 과정의 가치를 평가하는 ‘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지표는 고용유지 기간, 결근·지각 감소율,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개선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표준도구와 사례관리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창업을 평가할 때에는 단기적인 ‘성공 건수’보다 창업 후 장기 생존율과 안정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변화는 상담노트, 출결표, 동료 피드백 등 사례관리 기록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예산과 평가지침도 이에 맞게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히 “몇 명이 창업했는가”를 묻는 대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마을 기반 소규모 작업장, 커뮤니티 주방, 수선·리사이클 공방 등 ‘천천히 회복하는 일터’에서 관계가 복원되고 자기효능감이 쌓이면, 참여자는 오랜 무기력에서 벗어나 내일을 계획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삶의 기반이 단단해질 때, 취·창업의 성과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될 것이다.

현장은 사람의 속도에 맞춘 일과 배움의 리듬을 설계해야 한다.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서 성과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로서의 자활이다.

자활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만 준비된 과정 속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다수는 ‘일자리 복지’를 통해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활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길이다.

자활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우리 곁의 가장 취약한 이웃이 ‘일과 관계’를 통해 존엄을 회복하도록 돕는 복지다.

창업은 준비된 소수에게 성장의 사다리가 되겠지만, 다수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 복지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의 언어가 숫자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자활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분명하다. 자활은 사업이 아니라 복지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3개월 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며 변제를 독촉하자 곧 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 중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채권자로 하여금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의 재판과 달리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에 반하여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주 이내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

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소액소송도 가능하나,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11월 14일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 인증관리요원 2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매년 7~8회 정기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봉사단 홍보, 위촉, 활동재료 지원사례 등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게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20개의 봉사단을 신규 위촉했으며, 7개 봉사단에 활동재료를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재능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정보 제공

[홀트아동복지회, 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with 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2001년 12월생까지)
■ 지원내용: 미래설계 지원, 문화지원, 건강생활, 심리, 저축지원금 등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2025. 12. 2(화)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접수(개인 또는 기관신청)
■ 참고: love.holt.or.kr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 12월 31일(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매체현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밀알복지재단, '봄날의 기적' 장애우기가정 방송 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치료·수술이 필요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
■ 지원항목: 수술비, 치료비, 약제비, 생계비, 주거개선비 등
■ 지원금액: 1가정 당 1500만원(방송 후 1개월 이내 지원 예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고: www.notion.so

[바보의나눔,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 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신청기간: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일 접수)
■ 사업기간: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출서류 구비 및 온라인 접수
■ 참고: babo.or.kr

[금순한부모상담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신청안내]
■ 지원대상: 7세 이하 자녀 양육 한부모 및 청소년 가정, 양육의지가 있는 한부모 및 청소년 입산부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내용: 긴급 위기지원(긴급 생계비, 연체 공과금, 월세 미납금, 임신·출산지원비, 긴급 의료비, 양육 물품비 등)
■ 사업기간: 2025년 1월~12월
■ 신청방법: 홈페이지(kumsncc.com) 내 온라인 신청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강원·충청·세종·제주 지역)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그 외 소외계층 아동
■ 지원자격: 현재 타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아동, 협력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기관 추천을 받은 아동) * 개인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교육비 월 10만원 씩 1년, 최대 3년 지원, 수능 교과과정 및 예체능 관련 교육기관 비용지원(온라인 수강료 가능), 직업능력 개발 관련 기관 비용 및 특수교육 비용 지원

■ 접수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lifeofthechildren.org

[우리금융미래재단, 위비프렌즈와 함께하는 위비랑 돌잔치]
■ 사업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만 1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동(2024년 1~12월생)
■ 지원인원: 총 50명
■ 사업기간: 2025년 4~12월 (총 9개월)
■ 지원내용: 주막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지원금 100만원), 찾아가는 돌잔치 지원, 간식비 지급, 선물키트 제공
■ 신청기간: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제출
■ 참고: www.woorifuturefoundation.or.kr

[하트하트재단, 2025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에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중위소득 150% 이내, 만 19세 이하 등록장애인)에 한함
■ 지원내용: 전신마취 치과진료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2025. 12. 31.(수)
■ 신청방법: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알복지재단, KB캐피탈과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 임신부 지원사업]
■ 신청대상: 국내 임신·출산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가정(2025년 중위소득 기준)
■ 지원내용: 임신 임신 지원(취약계층 임신부 태아건강검진 등 임신 관련 의료비 임신부 영양·건강검진 관련 비용 100만원 한도 지원), 임신선정가정 우리농산물 구입 상품권 20만원 지원(출산안심 지원(취약계층 임신부 출산 관련 의료비 또는 산후조리·관리비 100만원 한도 지원), 출산선정가정 K차임맘출산키트 20만원 상당 지원)
■ 신청기간: ~2025. 12. 31.(수)
■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참고: www.miral.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4-0840

▶ **어르신 식사 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4-5473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조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88-1435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7-1487

▶ **병원 내원자 안내 및 예진표 작성**
관리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70-5931

▶ **어르신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충주시립노인요양원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51-3211

▶ **시설 업무 보조**
관리센터: 해피하우스다솜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56-400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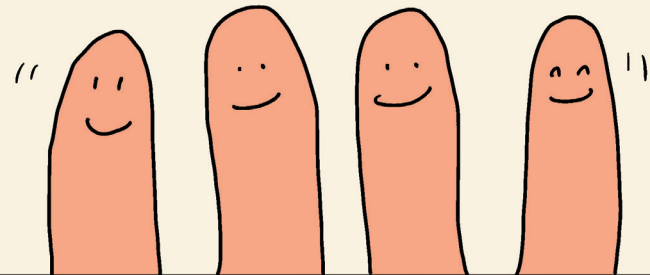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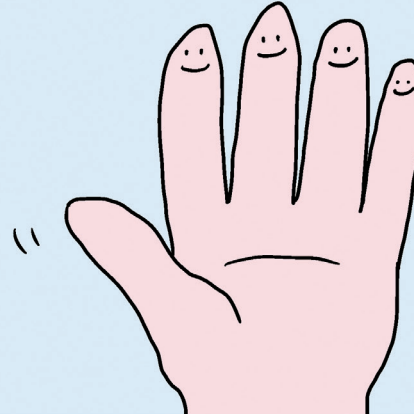
손

이창신 www.bokmani.com

자립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공생관계입니다. 마치 손처럼 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1.1. ~ 2026.12.31.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가 8시간 포함)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최저임금 상담 및 위반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